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4. 24.(수) 11:00,
(지면) 2024. 4. 25.(목) 조간

배포 2024. 4. 24.(수) 06:00

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된다

- 4. 25.(목)부터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·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(목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. 현재는 해양 오염방지 국제협약(MARPOL) 및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전국에 13개소*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.

*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

이번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은 2023년 10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,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%를 차지(2023년 말 기준)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. 이에 따라,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(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)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

이 외에도,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,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, 해양경찰청에 작성·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,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, 지자체, 관련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성희 (044-200-530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덕영 (044-200-5307) |

참고

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 현황

- (설치배경) 선박 오염방지 국제협약(MARPOL, '84년 가입)에서는 가입국에 자국 항만 입항 선박이 부당한 지체없이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수용시설(Port reception facility) 설치 요구
 - 이를 반영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8조는 종전에 해역관리청(항만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)에게만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·운영 의무 부여하였으나,
 - 금번 개정('24.4.25. 시행)으로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설차운영 가능토록 개선
- (현황) 13개 무역항(국가관리항 광양·마산·군산·평택·목포, 지방관리항 삼천포·통영·진해·완도·속초·옥계·제주·서귀포)에 설치, 해양환경공단 인근 지사가 관리
 - (시설/장비) 저장탱크 2~3개(5톤/h 처리가능) / 유해화학물질운반차·화물트럭 등



<전국 오염물질저장시설 위치도>



<오염물질저장시설의 모습>

- (수거절차) 선박·해양시설 등에서 사업소에 수거 요청(유선) → 수거 차량으로 수집·운반 → 오염물질저장시설 보관 후 물질별로 처리

<최근 7년간 오염물질 수거실적 (해양환경공단 vs 민간업체)>

| 연도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공단 처리량(톤)* | 9,099 | 9,610 | 9,524 | 9,985 | 9,707 | 9,571 | 8,616 |
| 민간 처리량(톤) | 257,715 | 317,659 | 303,717 | 333,913 | 348,106 | 344,294 | 407,391 |

* 공단 수거대상: 어선, 국·공유선박, 내항여객선, 내항화물선, 외항여객선·화물선, 건조중인 선박 등